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판지연 등 과제 해결” vs “재산신고 누락·자녀특혜 의혹”

이균용 “재산신고 미비한 점 사과 처가 재산 분배 문제로 인식 못해”

野, 비상장주식 통해 소득 계속 창출 후보 지명 안 됐다면 지나갔을 것

이 후보자 아들, 대학 학부생 시절 로펌 김앤장서 인턴… 아빠찬스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이 후보자가 법을 위반하고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야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공세를 쏟아내며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재판 지연’이란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사법부 구성원 사이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박용진 청문특위 야당 측 간사를 시작으로 모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이를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매우 불성실하다면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관례에 벗어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 당시 이렇게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시작된 주질의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나타난 재판 지연과 법관의 성향에 따라 유불리가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비상장주식을 통해 소득이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락하면 제대로 된 재산등록이 되겠나”라며 이 후보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명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됐는데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이 내용을 신고 안 하고 지나갈 뻔 했다”며 “법원행정처 온라인 신고망에 들어가서 신고할 때 비상장 주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고지되고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금도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처가 재산 분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이라고 국민들이 믿어왔는데, 이 판결 하나로 무너졌다”며 “징역 6개월에 판결문이 59장이다. 민간인 (재판)에 대해 판결문을 쓸 때는 1~2장을 쓰는데, 이 판결은 논리를 만드려고 60장을 썼다. (대법원장이 되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꼭 세워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어제 존경하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려 3년8개월만에 대법원 선고가 났다.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며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3개월 만에 회계 책임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 판결은 9개월만에 끝났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재판은 아직도 재판중이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사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로펌 김앤장에 대학 학부생 시절 인턴을 한 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렵다.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 아들이 군대에 가려고 휴학하려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인턴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는 많으나, 별도로 공고하지도 않고 심사위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하지 않는데 ‘관심법’으로 들어갔나. 아빠찬스로 들어간 것”이라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넘어가고 있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안보·경제, 보수정부가 낫다? 조작된 신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퇴임 후 첫 공식석상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참석
“구시대적 이념에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기에 앞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경제 정책 방향을 지적하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퇴임 후 서울에 온 것이 처음이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그 첫 행사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인 것이 매우 뜻깊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한편으로,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라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는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 시작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긴 공백 기간을 뛰어넘으며 이어달리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고,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역시 훗날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더 진전된 남북합의로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는 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며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 확대

당정,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자가돌봄비 연 200만원 등 지원

당정이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고립은둔청년, 청년우울증, 가족돌봄청년 등 각종 사회 문제들은 고용과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청년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이 제시한 청년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 건강 ▲청년 자산형성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먼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로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본인의 학업과 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자조모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우처 지원은 가족돌봄과 가사,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올해 8월부터 병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 이해, 소통교육,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2023년 180명인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내년에는 230명으로 50명을 늘리고, 맞춤형 사회 관리를 확대해 1대 1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더불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금년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가입 유지 요건을 바탕으로 현재 약 9만명의 누적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대상을 현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청년우울위험군의 급격한 증가와 일련된 범죄사건에 주목하고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 건강바우처 사업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3309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